

배포

2026. 7. 30.(목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안태준 의원과 사전예방 중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

- 안태준 국회의원과 발주자 참여형 안전감시단 도입 위한 정책토론 개최
- 안전감시단 법제화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단계적 도입 방안 논의

□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30일(목)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태준 국회의원과 「건설안전 패러다임의 전환: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체계로 실효적 위험제거」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토론회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시공사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발주청이 참여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.

○ 안태준 국회의원(경기 광주시을/더불어민주당) 등이 주최*하고 LH가 주관했으며,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,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한국안전학회, 대한산업안전협회, 국토안전관리원이 후원했다.

* 김남근 국회의원, 복기왕 국회의원, 염태영 국회의원, 이용선 국회의원, 정일영 국회의원, 조인철 국회의원, 허영 국회의원

□ 오전 10시 안태준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, LH 진상훈 차장, 한국안전학회 오태근 교수, 법무법인 바른 안선영 변호사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.

○ LH 진상훈 차장은 ‘LH안전감시단 추진배경 및 운영성과’를 발표했다. 지난해 LH가 자체적으로 ‘LH 안전감시단’을 도입해 운영한

결과, 6개월간 총 1,767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했을 뿐 아니라 시범 도입 현장(4곳)이 무재해 현장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. 또한, 올해 4월부터 약 105개소 현장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, 안전감시단 운영 현장의 재해율이 타 현장 대비 재해율이 38.6% 낮게 나타났으며 발주자 참여형 안전감시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.

- 이어서 한국안전학회 오태근 교수는 ‘한국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해외사례 연구’를 주제로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영국 CDM, 독일 SiGeKo, 싱가포르 DfS 등 해외사례를 발표했다.
-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바른 안선영 변호사는 ‘안전감시단 법제화 방안’을 주제로, 발주청이 안전감시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의2 신설 필요성 및 단계적 도입 방안 등을 발표했다.

□ 이어서 오태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. 토론에는 ▲이창훈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▲김영희 대한건설협회 실장 ▲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▲박종일 한국안전학회 부회장 ▲권철환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장 ▲이돈규 대한산업안전협회 본부장 ▲최수환 금호건설 상무 등이 참석했다.

□ 안태준 국회의원은 "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시공사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발주청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예방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"라며 "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이 법과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 입법 과제를 적극 챙기겠다"라고 밝혔다.

□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"건설현장의 안전은 시공사, 감시, 발주자, 정부와 학계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"라며 "현장에서 확인한 안전감시단의 가능성이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,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안전기획처	책임자	팀 장	서한수	(055-922-4952)
		담당자	차 장	진상훈	(055-922-4963)